

야 “기업 불러 확인해야”... 여 “공기업에게 검증 가능”

국감 현장

여야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기업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전력·용수 확보와 투자계획을 검증하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기업 기관장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감에 증인이 출석하려면 일주일 전 채택·통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 날인 터라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일부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기후노동위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감은 본질의에 앞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계획과 전력·용수 확보 방안을 화하인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

호남반도체관련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등 공방 나경원 “호남 희망고문 안되게 전력용수 확인해야” 신정훈 “야당이 기업총수불러 팔 비틀기 하려하나”

원 SK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이날도 총수 출석이 어렵다면 사업을 책임지는 부문장급 이라도 불러야 한다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철규 의원은 “삼성전자·SK 회장과 SK하이퍼 대표이사 세 사람을 신청을 했고, SK하이퍼 대표이사만큼은 증인으로 꼭 채택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런 정치성 질문이 아니다라고까지 천명했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증인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절대 고집하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기업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설만 해놓고 가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출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은

896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라면서 “투자 규모와 전력·용수 확보, 지역 상생 방안까지 국정감사에서 묻지 않는다면 어디서 답을 듣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력·용수 공급의 책임이 정부와 공기업에 있다며 출석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맞섰다.

김주영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이어 이날 한전과 발전사 사장들이 출석했다며 “야당에서 궁금한 부분은 해당 공기업 사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며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신정훈 의원은 야당의 기업 관계자 출석 요구에 대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쟁화하고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 비틀기를 하려는 것 같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한전을 상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민

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고 자체를 요청했지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는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정치 공세로 국정감사가 자질을 빚는 것은 부적합하

다”며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노동위 김정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서 증인 채택논의를 말기고 정회한 후 이날 오후 국감을 이어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5만명 서명... 차등 지급 비판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5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 확대와 광주 재정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까지 시민 5만여명이 ‘전면 실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날 7일 20만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한 이후 목표의 4분의 1을 채운 셈이다.

특히 본부는 “시민들의 요구는 전남 광주 통합과 함께 물라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는 것”이라며 “농어촌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16개 군지역으로 한정됐다”며 “그 것마저도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에는 월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는 ‘반쪽짜리 기본소득’”이라고 꼬집었다.

본부는 “내년에는 전국 35개 군지역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정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재정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80%로 높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지방은 영화만...청년문화예술패스 양극화 키워”

정준호 “비수도권 영화 결제 78.5%...문화 인프라 확충해야”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도입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비수도권 청년들의 문화 격차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사진) 이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전 지역의 영화 결제 건수 비중은 최소 71.7%에서 최대 78.5%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영화 결제 건수 비중이 64%대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지방 청년들의 패스 사용이 영화 관람

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는 셈이다.

반면 콘서트와 연극, 뮤지컬, 전시 등 다양한 공연예술 관람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콘서트 결제 건수 비중은 약 10%(경기 10.4%, 서울 9.9%, 인천 9.8%)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5~7%대에 그쳤다. 연극·전시·뮤지컬 역시 수도권은 3~5%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은 대부분 1~2%대에 불과했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영화 관람이 허용되면서 ‘청년들의 순수예술 향유’라는 기존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체 이용 금액 187억5000만원 중 영화가 73억7000여만원 (39.3%)을 차지했고, 콘서트(66억2000여만원, 35.3%)까지 더해 상업 장르 두 곳에만 전체 예산의 약 75%가 쏟겼다.

정준호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대형 콘서트 관람과 상업 영화 소비 수단이 되고 있다”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비수도권 공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순수예술 관람 시 추가 마일리지나 할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축산물 해외진출 방안 모색

국제교류 연구회 활동돌입...“실질적 지원책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는 최근 의원연구단체인 ‘전남광주 국제교류 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회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제교류를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연구회에는 박준엽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문성·신민호·전호건·김미연·강경윤·김수관·이현명·박은정·박수민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연구과제는 농축수산물 수출진

락, 해외 지방정부·지방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경제협력 모델, 지역 생산자와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해외 판로 확대에 연결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연구 주제와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 연구구역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해경 갯벌 구조장비 관리 부실...개발 중단”

서삼석 “최근 5년간 사망자 40명...장비 확보 시급” 지적

갯벌 고립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갯벌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구기관의 잇따른 경영악화로 중단돼 연구개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사진) 이 19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로봇 개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갯벌 구조로봇 연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중 38억원을 사용하고도 당초 목표한 구조장비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갯벌 고립사고는 갯바위, 테트라포드 사고와 함께 대표적인 연안 안전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이 사망하고 397명이 구조됐다. 지형 특성상 구조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고립 위험이 높아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전용 장비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해경은 인력 중심의 갯벌 구조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갯벌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한국형 전천후 구조로봇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2023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 완료를 불과 5개월 앞둔 2023년 1월, 주관연구기관인 A업체의 경영악화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경



도가 나면서 연구개발이 중단됐다.

문제는 연구기관의 경영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경 등 관계기관이 A·B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 특별평가에서는 ‘재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에 대해 모두 ‘부도 위험 없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경영악화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연구기관의 재무건전성 검증과 사업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비 관리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A·B업체가 연구비 2억8000만원을 연구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38억원의 연구비가 집행됐지만 당초 계획했던 구조로봇 개발은 완료되지 못했고, 연구기관 선정부터 사업수행,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중단되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됐다”며 “연구기관의 부도 위험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마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광주서 김치파티 열려...김치축제 23일 개막

25일까지 광주청사 일원...MZ 겨냥 팝업스토어 등 눈길

전통 김치부터 오감을 사로잡는 이색 요리, 흥겨운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젊은 감성의 소비 콘텐츠까지 한데 버무려지는 김치축제가 가을날 광주에서 선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33회광주김치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광주청사 일원에서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린다.

△이색 김치요리부터 화려한 공연까지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 공간 ‘천인의 밥상’에는 지역 맛집과 개성 있는 메뉴로 주목받는 외식업체 10곳이 참여해 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요리

를 선보인다. 솔뚜껑 삼겹살과 보쌈 등 친숙한 메뉴는 물론 배추라멘, 묵은지 오일파스타, 김치마요 짜조 등 이색 김치 요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김치파티’는 23일과 24일 오후 6시30분 아와음 악단 주무대에서 열린다. 첫 날에는 오페라와 크로스오버,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이 펼쳐지며, 둘째 날에는 ‘연희점주리’의 전통연희 퍼포먼스와 ‘클래트릭스

포니오케스트라’의 품격있는 연주가 더해져 축제의 흥을 더한다.

△김치담그기부터 전시·놀이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가 비법을 전수한다. ‘김치체험학교’에서는 직접 김치를 담그거나 무등산수박 장아찌 주먹밥을 만들어보는 이색체험이 진행된다. 광주청사 1층 ‘김치 팝업 전시’에서는 김치의 역사와 문화, 대통령상 수상작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나주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연계해 남도음식명인의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 등 콘텐츠 확대 올해 김치마켓과 농수산물 장터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김치마켓’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의 김치를 비롯해 대한민국 김치명인의 김치, 전통시장 맛집 김치 등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MZ세대를 겨냥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오뎅만 사는 김치’에서는 볼 배추김치와 한입김치 등 이색 김치를 판매한다. 6개 업체의 김치를 무작위로 구성한 ‘김

치 랜덤팩’도 마련한다. ‘김치가 최고심’ 팝업스토어에서는 김치를 소재로 한 개성 있는 상품을 선보여 젊은 층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대중교통 이용 당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공간 조성을 위해 21일 오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광주청사 앞 사거리부터 한국은행 후문 삼거리 구간의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광주청사 주변 관공서와 상무지구 평화공원 지하주차장 등 외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